

## 경제력집중, 무엇이 진실인가

2012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 재벌규제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규제하자는 출총제 부활안,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출자구조 규제안, 은산(銀産) 분리를 넘어 비은행 금융업을 포함하는 금산(金産) 분리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과격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한경쟁시대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치권은 국제적 정합성과 동떨어진 기업규제를 주장하는가? 정치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흔히 특정 대기업군의 자산 또는 매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통계값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부적절하며, 현상을 왜곡 전달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분자와 분모 변수의 선택에 따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게 됨을 이해하고 경제학적으로 객관 타당한 분석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선진국의 경우 '경제력집중 = 시장집중'의 문제, 반면에 한국에서는 '경제력집중 = 일반집중'의 문제로 인식하는 독특한 경향
  - 경제력집중은 소유집중, 시장집중, 복합집중, 일반집중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시장집중에 의한 경쟁제한과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 문제로 여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일반집중 규제에 관심이 경도되고 있음
  - 일반집중은 특정 대기업(집단)군의 생산, 판매액 또는 고용총량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대기업군의 사업을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모순을 자초
  - 그럼에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확산되는 속에서 경제력집중(일반집중)을 막겠다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출자총량과 출자형태 및 구조,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안을 발의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제적 정합성에서 벗어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 만큼 한국의 경제력집중(일반집중)은 심각한 수준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가?

-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부각하는 측에서는 흔히 30대 기업집단(또는 1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제시
- 예를 들어 '재벌닷컴'은 지난 8월 27일, 2011년 10대그룹 매출액이 GDP의 76.5%에 이른다고 보도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30대그룹의 자산총액이 GDP의 95%에 이른다며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문제인 양 호도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 이처럼 자산 또는 매출을 분자변수로, GDP를 분모변수로 해서 경제력집중을 계산하면 경제력집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분자와 분모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이질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방법론상 치명적 오류임

□ GDP를 분모로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 분자는 자산, 분모는 GDP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貯量 변수(Stock Variable)를 流量 변수(Flow Variable)로 나눴다는 점에서 방법론상 오류임
- 같은 방법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 나라의 경제력집중 역시 높게 나타나는 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10대기업의 자산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로서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7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매출액을 분자로 GDP를 분모로 하여 경제력집중을 측정하는 경우, GDP는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해외생산,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력집중은 상향편의(upward bias)를 보이게 됨
- 같은 방법(매출액/GDP)을 네덜란드에 적용하면, 10대기업 집중도는 98%로서 한국의 10대 그룹 집중도 68.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이 방법을 사용해도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경련 측에서는 중소기업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로 10대그룹의 68.5%보다 높다하면서 매출액/GDP 산식을 국내 대기업에 한정해서 계산, 발표하는 것은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과장 왜곡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분자, 분모에 동일 성격의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력집중을 측정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은 장기 증가 추세에 있지 않으며, 주력업종 특화율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

- 분모 변수에 GDP 대신 금융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자산총액을 사용해서 30대 그룹의 경제력집중을 측정하면, 자산집중도는 2000년 42.4%에서 2005년 39.6%, 2010년 40.0%로서 최근 10년 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마찬가지로 분모 변수에 GDP 대신 금융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매출총액을 사용해서 30대 그룹의 매출집중도를 계산하면, 2000년 44.1%에서 2005년 35.4%, 2010년 35.8%로 최근 10년 내 경제력집중도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30대기업집단 비금융업 경제력집중 추이

(단위: 비중,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산	42.4	38.2	38.8	37.5	38.9	39.6	40.5	41.6	38.7	38.2	40.0
매출	44.1	41.2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주: 집중도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산총계와 매출총계를 분모로 하여 산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특정 기업집단의 매출총액 중에서 1대 주력업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문화율 또는 특화율을 계산하면, 30대 그룹의 평균 특화율은 2000년 48.5%에서 2010년 57.3%로 점진적 상승 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력 일반집중 규제는 바람직한 정책목표일 수 없으며, 재벌규제의 논거로 경제력 일반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통계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경제력 일반집중에 대한 한국 특유의 시각과 그에 근거한 규제논리는 자원배분효율,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일반집중의 문제를 특별히 걱정해야 할 까닭이 없음